

다산포럼

소득주도성장 성공하려면 13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침체에 빠진 직접적 이유는 가계소비와 기업 투자 침체에 의한 내수침체 때문이다. 내수를 늘리려면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IMF와 OECD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한국에 권고하는 것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과 가계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가가 중요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들쭉거리고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조만간에 집주인들은 전세와 월세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융자 방식 바람직

울리려고 할 것이고, 집 없는 세입자 가구는 그만큼 타격을 받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켰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집 없는 중산층 이하 서민 소득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안정화 내지 연착륙 쪽으로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아침차게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심의 낡은 주거지를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공동으로 정비·수선한 다음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심 재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장점을 종합·확대한 것이다.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처럼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투기적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문제는 매년 10조 원씩 투입하는 총 50조 원의 재원을 공공자금으로 전부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점이다. 리츠 시장의 수익률은 보통 6%에서 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의 경우 4%에도 리츠 자금이 들어왔지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채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조만간에 집주인들은 전세와 월세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리츠 수익률 외에도 건설업자와 집주인도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모델이 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된다는 기대는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다. 부동산업자들은 이런 시장의 기대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전망하는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공성이 중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민간의 리츠 자금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정책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다른 재정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사업이라면 국토교통부의 도시주택기금 재원만 고려하지 말고 다른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공공부문의 저축이 급증하고 있어 이 재원을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저축 대비 사회보장기금 저축 비율은 1991년 2.6%에서 2016년 7.6%로 상승했는데, 이유는 국민연금의 저축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금융자산 운영을 보면 국내채권 비중은 2008년 77.4%에서 2016년 52.9%로 감소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2008년 12%에서 2016년 18.3%로 증가했으며, 해외투자 비중은 2008년 6.

3%에서 2016년 17.9%로 급증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침체로 국내 주식시장은 발행시장 기능이 위축되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는 사실상 주식유통시장에 대한 투자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와 해외투자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자산운용이 국민계정 상의 투자로 이어지는 연관성이 점점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법 10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동의할 때 정부는 5년 만기 국제 수익률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 5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현재 1.9% 수준이므로 정부가 1.9%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연금 자금을 차입해 쓰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실제 사용될 일은 없겠지만 계약 조건에 국민연금이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즉각 원금을 상환한다는 유동성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4%가 넘는 리츠 자금에 의존한 비즈니스모델이 아니라 2%대의 재정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재정융자 자금 조달이 부담스럽다면 이자 차액만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도 있다. 노후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성에 충실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어야 소득주도성장도 성공할 수 있다.

정춘 특·특



정가온
청년 1000명 고민 듣기 프로젝트 진행자

모든 순간이 선택인 삶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작게는 아침에 언제 일어날지부터 밥은 뭘 먹을지, 오늘 하루는 무엇을 하며 보낼지 등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선택해가며 살고 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있나? 어릴 적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교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하기에 원치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했다. 대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오전 수업이 없어도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용돈을 벌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아침집에서 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은 뒤에는 책임감이 원치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먹는 것 또한 누군가는 형편이 어려워 서, 시간이 없어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선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 나는 그걸 기회라고 한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연 정말 한 번도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혹시 왔지만 기회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건 아닐까?

나는 지금까지 만난 청년들이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 청년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게 기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의 대답은 “그게 기회인지 모른다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이지 않을까?”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기회’라는 게 왔을 때 우리는 꼭 붙잡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 한 대

학 학생회를 상대로 단체 고민을 들었다. 다들 전한 사이어서 그런지 막상 자신들만의 고민을 말하지 못했다.

나는 2가지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참을 고민하던 학생들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운동, 그림, 배우, 파일럿 등 다양한 꿈이 있었으나, 가정형편과 부모 반대, 신체적 제약, 수능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분위기가 띄우기, 그림 그리기, 잘 모르겠다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그때 마지막에 앉아있던 한 여학생이 울음을 터트렸다. 너무 갑작스러운 울음에 다들 당황했고, 그 여학생을 달래기 시작했다. 울음을 터트린 여학생은 유일하게 두 가지 질문에 “몰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틀린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본인만 두 가지 모두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다.

과연 정말 그 여학생이 틀린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이 없었다. 어릴 때는 이미 사회가 그어 놓은 틀 안에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학교에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갔다. 그리고는 곧장 취직해야한다고 해서 취업준비에 매달리고, 취직에 성공하면 결혼자금을 모은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여유조차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너무 몰라서 일 것이라고, 그러나 잠시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투자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금은 추상적인 질문부터 서서히 구체화하며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까지 의미 있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투자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들이 말하는 ‘기회’가 왔을 때 고민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社說

국민의당 조금하게 생각 말고 길게 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간의 점예한 인사 공방 속에서도 높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강경화 외교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한재소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국민 상당수가 ‘궁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김이수 후보자 역시 ‘적합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CBS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도 결과는 비슷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응답이 56.1%였던 반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34.2%로 나타났다. 강경화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1%가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야당은 세 후보자 중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

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한목소리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이러한 입장은 보수 정당으로부터 ‘여당의 2중대’라는 비난을 받는 터에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 주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전직 외교장관 10명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데다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후보를 반대했을 때의 역풍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수의 국민은 후보자 일부의 흠결보다는 국정 운영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국민의당으로서의 내년 지방선거 등을 생각하면 조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당장 보여 주려 하기보다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기회는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것이다.

‘포항공대 버금가는 한전공대’ 기대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공사 설립과 에너지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천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지난 5·9 대선 이후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옛그제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 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호남에서의 5·9 대선 압승은 당직자들의 노고에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격려한 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호남 공약’은 이제 시작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광주 정신을 이어 가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추 대표의 발언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끈 대목은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의지다. 추 대표는 “한전공대를 포항공대 버금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 메카로 육성해 새로운 호남 시대

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광주·전남 발전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도시의 공통점은 관련 분야의 대학과 기업이 인근에 위치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국토 균형발전의 미래가 담긴 혁신도시 활성화를 실현할 구심체라는 점에서 마땅히 추진돼야 할 우선 과제다.

더욱이 고무적인 건 조환익 한전 사장의 관심과 의지다. 조 사장은 이날 “빛가람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지역 혁신산업의 대단한 성공 사례이긴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며 앞으로 국가 과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지역의 염원을 받아들여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전공대를 조속히 착공시킴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키워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1987년 6월 9일 오후 4시 40분께 연세대 정문. 당시 로이더통신 사진기자였던 정태원 씨는 학생들 틈에 섞여 현장에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한 학생이 쓰러졌다. 이한열 군이었다. 그는 다른 학생이 달려와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지난 2003년 펴낸 ‘나의 취재기’에서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연세대에 모인 학생들이 막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는 찰에 벌써 경찰 쪽에서 마구 최루탄을

박힌 번사체가 떠오른다.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김주열 열사였다. 당시 부산일보 허종기 자(2008년 타계)가 이를 촬영해 지면에 보도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해 3월, 경찰이 열사 시신을 발타에 유기할 때 차랑을 몬 운전자가 56년 만인 지난해에 양심고백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막이 밝혀진 바 있다. 두 사건에는 경찰이 쓴 최루탄에 맞아 꽃다운 나이에 희생됐고,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돼 세상에 알려지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공통점이 있다.

역사를 바꾼 사진

쏘아 대가 시작했다. 교문 밖으로 몰려나갔던 학생들이 최루탄의 독한 가스에 밀려 다시 교문 안으로 뛰쳐 들어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최루탄 하나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교문 안으로 쫓겨 들어오는 한 학생의 뒤통수를 때렸다.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사진은 절개그림으로도 만들어졌다. 백 마디 설명이 필요 없는 한 장의 보도사진은 결국 ‘6월 항쟁’의 기록 제가 됐다.

#1960년 4월 11일 정오경에 경남 마산시 중앙동 해안.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종철·이한열의 유가족들이 함께 민주가요 ‘광야에서’를 제창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해야 하며, 한 열이가 당한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소박한 바람이 활지에서 배어 나와 올림을 준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 고



이건철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가장 유망한 신산업이자 인류의 쾌적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2030년 이면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체르노빌·후쿠시마 사태 등을 계기로 탈원전바람이 불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세계 각국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3년 전인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전 선포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개발을 시작했지만, 선포식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물론 지난 13년 동안의 성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0.8%로, OECD 33개국 중 최하위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은 물론, 일본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후발주자가 된 이유로 국내의 전문가들은 취약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추진주체가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도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다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원전 선포식 후 정확히 10년만인 2014년 에너지 종합공기업인 (주)한국전력이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밸리’다. 에너지 밸리는 한전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연관기업 500개를 유치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적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하고, 광주·전남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

는 전환기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 당연히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지방과 함께 산자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에너지 밸리 추진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추진 주체와 재원의 배분, 분담 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에서 ‘에너지 밸리 조성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정치권 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를 대규모 재원과 에너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한전으로 하기 위해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전기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산자부 반대로 이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 원전 정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등 에너지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밸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사회는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자부장관의 인선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에너지 밸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장관으로 인선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런티어이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하고, 지방경제도 발전시키는 최소 일석이조의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 산자부장관은 에너지 밸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난 주말부터 산자부장관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산업과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인 미래 먹거리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가, 의지, 추진력을 완벽하게 갖춘 인사 ▲집권당의 유력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대학과 바람직한 상생을 추구할 적임자 ▲전(前)도지사 시절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프로젝트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바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호흡을 맞추고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산자부장관으로 꼭 선임되기를 지역민과 함께 기원한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사회 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